

# 금융감독원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

2021. 5.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감 독 원

I. 추진 배경 .....	1
[참고1] 금융감독원 감독·발행분담금 제도 개요 .....	2
II. 개선 방안 .....	3
1.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 .....	3
2.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.....	6
3.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 .....	6
III. 향후 추진계획 .....	8

## I. 추진배경

-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설치법(\$46, 47)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\*으로 마련

\* 그 외 한은출연금, 증권발행분담금, 기타잡수입 등 존재

-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<sup>1)</sup>을 기본으로 하되, 금융회사별 부담능력<sup>2)</sup>도 고려하여 분담금 안분

1) 분담금의 60%는 금융업권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업권별로 안분

2) 분담금의 40%는 금융업권별 총영업수익 비중에 따라 업권별로 안분

- 그러나, '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, 외부기관 및 금융업계에서 개선 요구중

- (금융업계) 기존 부과체계는 신규업종 등장\*, 업종 간 점유율 변화\*\* 등을 미반영하는 바 과다부담 업권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 제기

\* (예) 전자금융업, 클라우드펀딩, 소액송금, P2P 등 : 부과 면제

\*\* (예) 과거 생보/손보 간 영업수익 격차가 컸으나 현재는 대동소이

- (국회) '19년 국감시 “현행 분담금 제도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”할 것을 권고(시정처리 요구)

⇒ 전문가 연구용역\*(19.2~12월),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(21.4월\*\*),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·의결(21.5월) 등을 거쳐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

\* 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(한국금융학회)

\*\* 분담금 제도개선방안 금융업권 설명 공청회 개최(21.4.30.)

## 1. 감독분담금

- ☐ (개념) 금감원이 감독·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(금융위설치법 §47①)
  - ☐ (부과금액) 매년도 금감원의 총지출예산에서 타 수입항목(발행분담금, 한은출연금 등)을 차감한 금액 (⇨차액부과방식)
  - ☐ (부과방식) 금융영역 간 1차 안분, 금융영역 내 회사간 2차 안분
    - ① (금융영역별 부담액) 3개 영역별 금감원 투입인력비중(가중치 60%) 및 영업수익비중(가중치 40%)에 따라 안분
    - ② (금융영역내 부담액) 영역 내 회사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을 가중평균한 규모\*에 비례하여 배분
- \* (은행·비은행) 총부채 가중치 100%
- \* (금투) 총부채 가중치 60% + 영업수익 가중치 40%
- \* (보험) 총부채 가중치 70% + 보험료수입 가중치 30%

## 2. 발행분담금

- ☐ (개념) 금감원이 증권발행 심사서비스(=증권신고서 제출증권)에 대한 대가로 증권발행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(자본시장법 §442)
- ☐ (부과금액) 증권종류별로 심사난이도에 따라 사전에 책정한 부과요율(분담금 징수규정에 명문화)대로 수수료 부과 (⇨정액부과방식)

<증권종류별 발행분담금 수수료율 현황 (금융위 분담금 징수규정 §5)>

증권구분		수수료율	증권구분	수수료율
채무증권	만기<1년	0.05%	지분증권	0.018%
	만기 1~2년	0.06%	파생결합증권	0.005%
	만기>2년	0.07%	수익증권	0.005%
	파생결합사채	0.005%	투자계약증권	0.09%

## II. 개선 방안

### 1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

#### 가. 금융영역 간 배분기준 개선 :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 확대

<참고 : 금융영역의 구분(금융위법 시행령 §12①)>

- \* ① 은행·비은행 : 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(새마을금고 제외), 여전, 은행지주, 신용정보, 정책금융 및 금융유관기관(주금공·캠코·신정원·신보 등)
- ② 금투 : 금투업자, 종금, 신평, 자금중개, 펀드평가, 채권평가, 펀드사무관리, 회사형펀드, 자본시장유관기관(거래소·예탁원·증금 등)
- ③ 보험 : 생보, 손보, 보험개발원, 보험대리점, 보험중개사, 보험계리사, 손해사정사, 보험유관단체(보험연수원, 보험계리사회, 보험대리점협회 등)

□ (현황) 감독분담금의 60%는 업권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, 40%는 부담능력(영업수익 비중)에 따라 배분

□ (문제점) 부담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음 → 감독분담금을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하는 법률\* 취지와 미부합

\* 금융위법 §47① :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부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□ (개선방안)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확대(60%→80%\*)

\* 금감원 총 감독·검사인력 중 업권별 구분이 명확한 인력(약 78%) 비중을 감안

◆ (현행) 투입인력 60%, 영업수익 40%  
⇒ (개선) 투입인력 80%, 영업수익 20%

<적용 예시> ■ 2023년 총 감독분담금은 3,000억원이라 가정

■ 은행·비은행 영역에 대한 금감원 인력투입비중이 50%이고 은행·비은행 영역의 전 금융권 대비 영업수익 비중은 60%라고 가정

☞ 은행·비은행 감독분담금 :  $(0.8 \times 3000 \times 50\%) + (0.2 \times 3000 \times 60\%) = 1560\text{억}$

## 나. 분담금 면제대상 축소

- ☐ (현황) 규모가 영세하거나, 감사빈도가 낮은 업권\*에 대하여 분담금 부과를 광범위하게 면제중
- ☐ (문제점) 실제 금감원의 감독·검사가 이루어짐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
- ☐ (개선방안)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
  - 다만,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하여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(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)을 적용하여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

<기존 감독분담금 면제업권에 대한 분담금 부과방향>

영업규모	감독수요		유형 분류	해당 금융회사
大/中/小	사실상 無	⇒	① 면제	역외투자자문회사, 자본법상 회사형펀드
極小(영업수익<30억)	大/中/小		② 건별 감독분담금 (100만원)	공통 적용
小(단, ≥30억)	大/中/小			상호금융조합, 해외송금, 펀드평가, 보험계리 등
大/中/小	小		③ 상시 감독분담금	전금, VAN, P2P, 클라우드펀딩, GA 등
大/中	大/中			

## 다.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

- ☐ (현황) 금융영역(은행·비은행/금투/보험)별로 할당된 분담금을 영역 내 회사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 규모\*에 비례하여 배분

\* (은행·비은행) 총부채 가중치 100%(=해당영역 총부채대비 총부채 비중)

\* (금투) 총부채 가중치 60% + 영업수익 가중치 40%

\* (보험) 총부채 가중치 70% + 보험료수입 가중치 30%

- ☐ (문제점) 영역별 세부 업종별로 금감원 감독투입비중과 분담금 부담비중 간의 괴리 발생\* → 업종 간 형평성 논란 야기

\* (예) ① 보험영역 내 생보와 손보 : 금감원 감독·검사 투입비중은 대등하나, 분담금은 생보가 많이 부담

② 금투영역 내 자산운용사 : 금투 내 감독·검사 투입비중의 약 1/3을 차지하나, 분담금은 금투전체의 1.5%만 부담

□ (개선방안)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영역별 배분기준 개편

금융영역	현행	개정	
은행/비은행	총부채가중치 100%	非금융 겸영업종 은행 등 기타	영업수익 가중치 100% 현행과 동일
금투	총부채가중치 60% + 영업수익가중치 40%	자산운용 증권 등 기타	영업수익 가중치 100% 현행과 동일
보험	총부채가중치 70% + 보험료수입가중치 30%	생손보 보험대리점 등	총부채 50% + 보험료수입 50% 영업수익 가중치 100%

① (은행·비은행) 非금융 겸영업종(전금, VAN 등)에 대해서는 금융 부문 부채 구분이 어려운 바,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 적용

- 기존 부과업권(은행 등)에 대해서는 총부채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

<적용 예시>

- 전금업자 A의 영업수익(300억)은 은행·비은행 전체(300조 가정)의 0.01%  
→ A사는 영역 전체 감독분담금(1,500억원)의 0.01%인 **1,500만원 부담**

② (금투) 자산운용사(집합투자·일임·자문)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 수요가 없는 바, 총부채 기준을 배제하고 영업수익 단일 가중치 적용

<적용 예시>

- A 자산운용의 총부채는 1조, 영업수익은 0.5조  
(금투전체 총부채는 400조, 영업수익은 100조, 감독분담금은 600억원 가정)  
→ (현행)  $60\% \times 600\text{억원} \times (1/400) + 40\% \times 600\text{억원} \times (0.5/100) = 2.1\text{억원 부담}$   
→ (개정)  $100\% \times 600\text{억원} \times (0.5/100) = 3\text{억원 부담}$

③ (보험) 생·손보의 경우 총부채/보험료수입 간 가중치를 금감원의 건전성/영업행위 감독인력비중\*을 감안해 70:30에서 50:50으로 변경  
(⇒ 2개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\*\*)

\* 금감원 보험감독인력 중 대략 절반이 건전성감독(→총부채규모 비례), 나머지 절반이 영업행위감독(→보험료수입규모 비례)에 투입

\*\* ('23년) 총부채가중치 60%, 보험료수입 가중치 40% ('24년 이후) 50% : 50%

※ '25년에 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, 보험시장 환경 변화,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금 제도개선 재논의 추진

<적용 예시>

- B 보험사의 총부채는 100조, 보험료수입은 14조  
(보험전체 총부채 1000조, 보험료수입 200조 가정, 감독분담금은 800억원 가정)  
→ (현행)  $70\% \times 800\text{억원} \times (100/1000) + 30\% \times 800\text{억원} \times (14/200) = 72.8\text{억원 부담}$   
→ (개정)  $50\% \times 800\text{억원} \times (100/1000) + 50\% \times 800\text{억원} \times (14/200) = 68.0\text{억원 부담}$

## 2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

- (현황) 금감원 결산시 수지차익\*(수입결산-지출결산)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독/발행 분담금 납부기관에 납부액 비율대로 반환

\* 수지차익 = 수입초과(수입결산-수입예산) + 지출불용(수입예산-지출결산)

- (문제점)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\* 때문에, 감독 분담금 예산이 과다편성(환급액을 감안하더라도 과다징수)

\* 발행분담금 수입은 자본시장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수입결손을 피하기 위해 예산편성시 보수적 편성 → 통상 실제 수입이 예산액 초과

- (개선방안) 결산시 수지차익 중 수입초과(수입결산-수입예산)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하도록 개편

<적용 예시>

- '22년 금감원 수입예산은 3,600억원(감독분담금 3000억원, 발행분담금 600억원)이며, 실제 수입액은 4,000억원(감독분담금 3000억원, 발행분담금 1000억원)  
→ 지출결산액은 3,400억원으로 600억원 수지차익 발생

수지차익 구분	현행 환급기준	개선 환급기준
수입초과 (4000-3600=400억원)	■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: 450억 (=600억 × 3000/4000)	■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: 400억
지출불용 (3600-3400=200억원)	■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: 150억 (=600억 × 1000/4000)	■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: 144억 (=200억 × 2600/3600) ■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: 56억 (=200억 × 1000/3600)

## 3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선

### 가. 현황

- 전년도에 ①재무건전성 악화, ②금융사고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③검사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.1%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감독분담금(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%)을 징수



□ (문제점) 검사투입인원이 기준치를 넘기만 하면 검사투입인원과 무관히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%를 부과하는 바, 실제 검사투입량과 분담금 징수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

○ 아울러, 추가감독분담금 금액결정시 재량여지가 없어서, 금융 회사의 자체적인 금융사고 방지 노력 등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

□ (개선방안) 추가감독분담금 금액 결정산식 및 재량행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

### ① 추가분담금 산출기준 개편

○ '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%(기존산식)'와 '검사투입 인력 규모를 감안한 산출금액' 中 작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개편

현행 산식	개선 산식
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× 30%	<p>①, ② 中 작은 금액</p> <p>①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× 30%</p> <p>② <math>\frac{(\text{해당검사 투입인원} - \text{해당영역 상위 0.1\% 기준 투입인원}) (= B)}{\text{해당영역 총 검사투입 인원} (= A)}</math></p> <p>× 해당영역 총 감독분담금</p> <p>+ 기본추가분담금(기준분담금 × 10%)</p>

#### <적용 예시>

회사명	검사 투입인원	영역 내 상위 0.1% 기준인원	해당영역 총검사투입	해당영역 분담금	①기준 (기존산식)	②기준 (개선산식)	추가 분담금
A증권	200명	160명	3,000명	600억	3.6억	9.2억	3.6억
B보험	350명	300명	3,000명	800억	0.3억	13.4억	0.3억
C은행	400명	350명	6,000명	1,500억	30.0억	22.5억	22.5억

\* A증권 :  $\{[(200\text{명}-160\text{명})/3000\text{명}] \times 600\text{억}\} + 1.2\text{억}(=\text{당해연도분담금} \times 10\%) = 9.2\text{억}$   
 B보험 :  $\{[(350\text{명}-300\text{명})/3000\text{명}] \times 800\text{억}\} + 0.1\text{억}(=\text{당해연도분담금} \times 10\%) = 13.4\text{억}$   
 C은행 :  $\{[(400\text{명}-350\text{명})/6000\text{명}] \times 1500\text{억}\} + 10\text{억}(=\text{당해연도분담금} \times 10\%) = 22.5\text{억}$

## ② 추가분담금 부과여부 및 수준 관련 재량행사기준 마련

- (추가분담금의 면제) 다음 사유 해당시 추가분담금을 면제
  - (i) (재무건전성 악화 관련 검사)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가 적기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
  - (ii) (금융사고 관련 검사)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
- (추가분담금의 감경)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 노력 또는 사고발생 후 수습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분담금의 최대 20%를 감면

### <적용 예시>

- ① (금융사고 방지 노력) 감독당국의 금융사고 인지 전에 자체 감사를 통해 자체 시정·치유 노력\*을 한 경우

\* 금융사고 원인파악, 관련자 제재조치, 관련 내규·매뉴얼 등 개정 등

- ② (사고수습 노력)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 등

## III. 향후 추진계획

- 「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입법예고('21.5.20~6.29일)

- 시행령·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('21.7~8월)
-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('21.8~9월)
-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심의·의결 ('21.9월)

- 분담금 제도 개선안 시행 ('22.9월)

☞ '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